

2022년 사회정책포럼 발제

사회기여 보상제도의 설계와 운영방안¹⁾

김상우(상명대학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사회기여활동의 촉진 필요

-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조직의 운영 방향과 가치가 전환(ex: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강조, 민간부문의 ESG 강조 등)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반에서 사회적 가치나 사회공헌 등과 같은 공익적 가치 구현에 대한 책임성이 부여되기 시작하였으며, 해당 가치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시도
-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공익 구현에 대한 책임은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 등과 같은 조직 단위의 책임으로만 인지되고 있다. 즉, 국민 개인에 대한 공익적 가치 실현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논의는 다소 제약
- 본 연구는 사회와 공공의 이익 등을 구현하기 위한 책임성의 범주를 민·관의 조직 단위를 넘어서 일반 국민 등을 포함한 범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

나. 사회기여활동의 개념 명확화와 정책 영역의 설정 필요

- 사회적 가치나 책임의 범주를 국민 개인의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순기능이 예상
- 공익의 실현과 공동체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복지 향상 등과 같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의 사회기여활동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기는 곤란
- 다양한 유사 개념이 공존하는 상황이며, 특히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사 개념이 중복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사회기여활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 영역 내의 활동의 범주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
- 각 개념이 혼재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명확한 개념적 정의(조작적 측면)가 선행

1) 본 발표문은 조태준 외(2021)가 수행한 「사회기여 보상제도 설계 및 운영방안(교육부 연구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이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 중 시사점을 중심으로 요약한 내용으로 참고문헌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 사회기여활동의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자원봉사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기여활동은 근본적으로 무(無)대가성이나 비영리성을 강조
 - 그러나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식적 지원체계 등이 수립 및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비의 보상 명목으로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이 제공
 - 규범적 차원에서 대가성이 없는 활동을 자원봉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무적 차원에서는 선의의 활동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비용이 지불되고 있음
 - 더 적극적 차원에서 사회기여활동을 촉진 및 사회 기여의 개념을 확산하고, 해당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활동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

2. 환경분석을 통한 사회기여활동 확산 필요성 제기

- PEST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 저성장 국면에서 한국 사회가 지닌 취약성과 위기는 사회경제 전반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재정의 취약성과 다양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수요대응의 어려움에 직면
 - 이에 따라 시민참여에 기반하여 사회구성원들 간 책임성의 공유를 통한 자발적·이타적 서비스 활동은 사회적·개인적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기제로 대두
 - 정치 및 정책환경요인의 분석 요약
 - 공공서비스 확산방식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 정부 주도 서비스 공급방식이나 민간이나 비영리 기관 등 경쟁적 서비스 제공방식을 넘어서 거버넌스 기반의 공공서비스 공급이 확대
 - 특히 지금껏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시민의 역할이 더 주도적이고 개입의 주체로서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시민 자발성에 기반을 두되 보다 공식화되고 조직화된 사회기여 체계 필요성이 요구
 - 경제적 요인의 분석 요약
 - 사회 기여가 실제 사회 전반에 주는 경제적 편익과 정부 재정지출의 감축 효과, 그리고 여가 인력의 경제적 자원화 등이 대표적
 - 먼저 자원봉사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기여활동이 지닌 인건비 절감 및 재정파급 효과 등이 확인되며, 기존 사회서비스의 대안으로 자리 잡은 현실적 여건에 주목
 - 다음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투입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지닌 비효율성 개선 및 비용 절감 효과 확인
 - 마지막으로, 퇴직자와 노인 등 사회에서의 유희인력 등의 사회 자본화를 통한

효율적 활용을 통해 사회 전반의 편익개선에 이바지

- 사회적 요인의 분석 요약

- 고령화는 궁극적으로 노인 세대를 부양할 사회자본 수요를 확대할 뿐 아니라, 공급 차원에서 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비경제활동 집단 증가를 발생시키므로 이로 인해 이들 간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연대해 갈 사회 기여체계 필요성이 확대
- 이는 곧 시민사회 성숙과 이어지게 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여활동을 통해 참여자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자본의 확산에 이바지

- 기술적 요인 분석 요약

- 전통적 비보상체계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넘어서 사회기여 확산을 위해 시도되는 다양한 유인체계들이 기술 발전을 통해 더욱 발전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전자시스템 방식의 활용을 통해 사회 전체의 편익을 제고
- 또한, 기술 발전은 궁극적으로 분야별 전담관리체계가 아닌 통합운영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시사점 요약

- 과거보다 다양화되고 확대된 비경제활동 집단을 사회기여활동에 참여시켜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의 강화 욕구를 보다 강화하는 데 초점
-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조기 퇴직자 등을 포함한 경력단절 집단, 청년세대 등 새로운 세대와 집단을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전략 수립 등 방향성이 필요
- 자원봉사 등과 관련된 정책 전반의 관리 주체가 분절화되어 관리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의 제거 필요
- 여성가족부는 청년(청소년 포함) 집단에 특화된 별도의 자원봉사체계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및 체육 분야와 관련된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별도의 자원봉사체계를 주도
-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정책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다양한 집단(ex: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특성이나 자원봉사 이슈(ex: 문화, 체육 등 분야 전문성)에 따라 각 사회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자원봉사정책을 분산하여 운영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자원봉사의 효율성(중복성 제거 등)을 강화하기 위한 총체적인 통합관리 및 운영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
- 총체적인 조정체계를 수립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를 조정 및 감독할 수

있는 상위의 조직 단위에 사회 기여 총괄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우선 고려

- 예를 들어, 총리 또는 사회부총리 등으로 사회기여 총괄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
- 다음으로 포괄적 수준에서 시스템의 통합운영 구축이 요구
 - 하나의 시스템에서 집단별·이슈별 자원봉사에 대한 총체적 관리를 지향
 - 예를 들어, 생애주기별·분야 전문성별 등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카테고리별로 자유롭게 자원봉사 콘텐츠와 자원봉사자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고려

3. 문헌연구의 요약과 사회기여활동의 조작적 정의

○ 문헌연구를 요약한 결과는 아래의 <표 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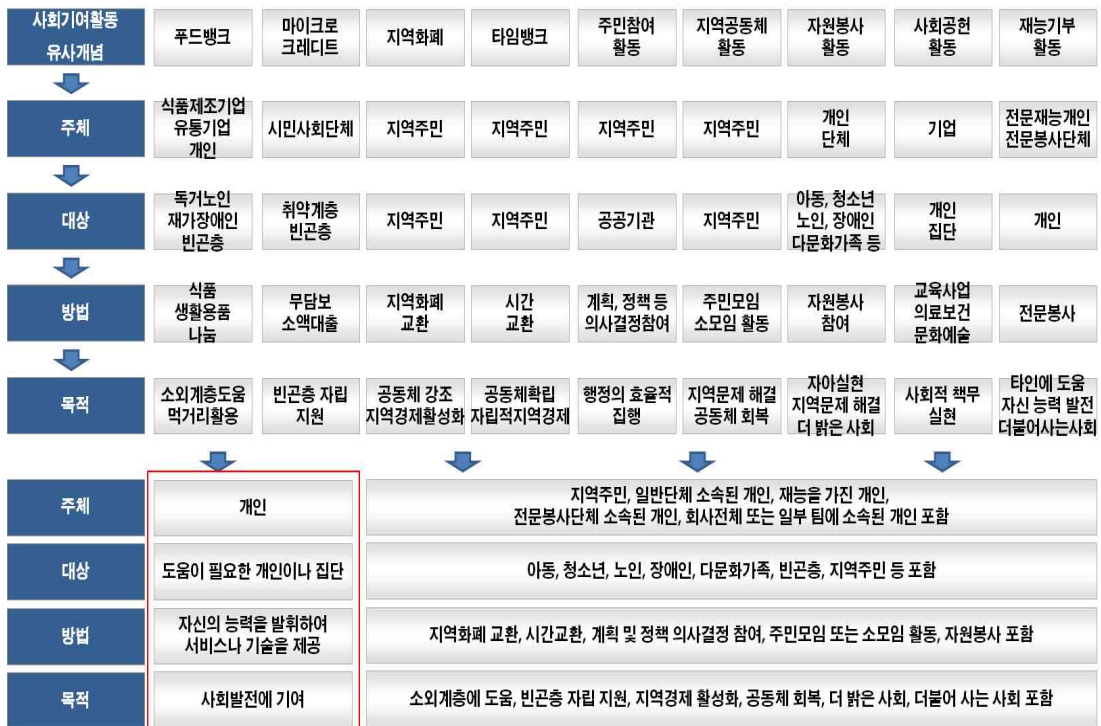
<표 1> 사회기여활동 유사개념 정의

No	개념	주체	대상	방법	목적
1	푸드뱅크	식품제조기업 유통기업 개인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빈곤층	식품 생활용품 나눔	소외계층 도움 먹거리 자원 활용
2	마이크로 크레딧	시민사회단체	취약계층 빈곤층	무담보 소액대출	빈곤층 자립 지원
3	지역화폐	지역주민	지역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화폐 교환 서비스 구입	공동체 강조 지역경제 활성화
4	타임뱅크	지역주민	지역주민	서비스 제공 시간 교환 서비스 구입	공동체 확립 자립적 지역경제
5	주민참여 활동	지역주민	공공기관	계획, 정책 등 의사결정 참여	행정의 효율적 집행
6	지역공동체 활동	지역주민	지역주민	주민모임 소모임 활동	지역 문제 해결 공동체 회복

7	자원봉사 활동	개인 단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자원봉사 참여	자아실현 지역 문제 해결 더 밝은 사회
8	사회공헌 활동	기업	개인 집단	교육사업 의료·보건 문화·예술 기부 자원봉사	사회적 책무 실현
9	재능기부 활동	전문 재능 개인 전문 봉사단체	개인	전문봉사	타인에 도움 자신 능력 발전 더불어 사는 사회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기여활동은 아래와 같이 정의

<그림 1> 사회기여활동의 개념 종합



4. 전문가 인식조사²⁾

- 자원봉사, 사회공헌과 관련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1차는 서면 인터뷰(5명 배포, 3명 회신), 2차는 FGI(총 6명) 방식으로 진행
- 기존 제도 운영 방식의 한계에 대한 논의
 - 자원봉사의 경우,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에서 확산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법과 제도 등을 근거로 관 주도의 자원봉사 체계가 수립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에 산발적이며 소규모로 추진한 자원봉사 영역이 흡수된 형태로 발전
 - 정부 편익적인 관점에서 구조화됨에 따라 각 부처가 관할하는 자원봉사활동간 분절화가 심화
 - 자원봉사에 대한 총괄 기능은 행정안전부에 부여되었지만,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책수립 및 관리, 그리고 사업추진 등이 부처별로 분절화됨에 따라 실무자는 관련 활동을 위한 사업지원 및 관리과정에서 고충을 경험
 - 자원봉사 관리를 위한 온라인 기반 플랫폼이 부처별로 운영되는 상황(행정안전부의 1365, 보건복지부의 VMS,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품앗이, 교육부의 나이스 등)에서 자원봉사 실무자의 업무상 혼선과 비효율성이 크며,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의 혼란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논의
- 대가성에 대한 고민
 - 사회기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자원봉사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기여활동을 촉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선의를 퇴색하며 창의적인 자원봉사활동과 방식의 활성화를 제약할 우려를 언급
 - ‘내가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1) 축적된 기여 시간의 상시 확인, 2) 일정 이상 시간 축적자에 대한 명예장 부여 등을 고려(ex: 헌혈 명예장 등)
 - 또 다른 관점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기여활동 등은 넓은 공익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정부가 단독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미시적 영역의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을 통해 제공하기 위한 수단
 - 공익실현을 위한 행위에 대해 참여 축진을 목적으로 해당 행위에 따른 노고나 고충을 인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기여 보상의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다만 보상의 과도화는 경계)

2) 이상에서 국내 및 해외 사례를 다루었으니, 요약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방대하므로, 발표문에서는 제외하였다.

- 추진체계 정비의 방향

- 각 부처의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사회기여의 추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역별 보상시스템의 분절화 및 시스템의 낮은 통합성 등으로 인한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
- 고용노동부는 은퇴자가 직장생활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자원봉사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후속세대의 직무능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 활용
- 보건복지부는 기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비 보상에 기반을 둔 자원봉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 확보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 확산
- 특정한 부처를 중심으로 사회기여 전반을 재편하기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시스템 간 통합과 융합을 통해 분산된 사회기여 역량을 밀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
- 이러한 구조에서 시스템의 관리 주체 등은 현재의 시스템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위의 정책조정체계는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을 참조하여 「사회기여활동 기본법」 등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총괄 및 조정 하는 기능을 사회부총리 수준으로 격상하여 부처간 비효율을 조정할 필요성을 확인

5. 제도의 주요 특성

○ 사회기여 보상제도 설계의 주요 쟁점

- 용역과 용역의 교환

-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포함한 사회기여 관련 활동의 문제 중 하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을 근거로 무대가성(무보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등과 관련하여 실비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 등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비영리성에 적합하게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보상 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모순을 보임
- 더욱 중요한 점은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2017년을 기점으로 자원봉사 참여율은 계속해서 감소되는 추세
- 즉, 기존의 예산 활용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자원봉사의 활성화 등이 제약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은 자원봉사가 갖는 무대가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활성화 전략으

로서 당위성이 제약

- 따라서 본 연구는 금전이 아닌 다른 방식의 보상을 촉진함으로써 사회기여활동 전반의 촉진 등을 유인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회기여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 투입한 노동력을 또 다른 노동으로 교환하는 ‘용역-용역 교환방식’의 모델을 제안
- 예를 들어, 은퇴 직후의 시점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사회기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시간 단위로 적립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당사자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ex: 요양서비스)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사회기여 서비스로 보상받는 방식 등을 고려

- 적립과 활용 방식

- 현재 다수의 부처에서 각 자원봉사의 영역별로 실비 보상 외에 시간 적립, 마일리지 적립 등과 같은 시간이나 점수 등을 혼합하여 복잡한 자원봉사의 활동을 양적으로 적립
-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대한 통합적·종합적 관리체계 등이 미흡하며, 이로 인해 자원봉사활동의 보상으로 적립 받은 시간이나 마일리지 등을 활용(사용)할 수 있는 영역도 제약
- 사회기여와 관련한 욕구의 변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세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기여활동을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모든 사회기여활동의 단위를 시간 등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해당 사회기여 시간을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을 때 사회기여활동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예를 들어, 은퇴자는 본인의 경력과정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전문적 지식(ex: 창업, 조직관리, 법률, 세무 등 수많은 영역)을 후속세대에 제공하고 해당 지식 제공의 반대급부를 미래 시점에 요양서비스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
- 단기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기여 시간의 적립 정도 등을 계량화하여 취업 시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청년층의 참여를 촉진
- 사용하고 남은 시간은 미래의 시점에 또 다른 용역으로 교환하여 본인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활용
- 특히, 사회기여 시간을 기부하는 방식 등을 통해 기부라는 또 다른 공익적 활동의 촉진 등을 달성하는 형태로 활용
- 개인은 사회기여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를 수년 또는 수십 년 후에 다른 사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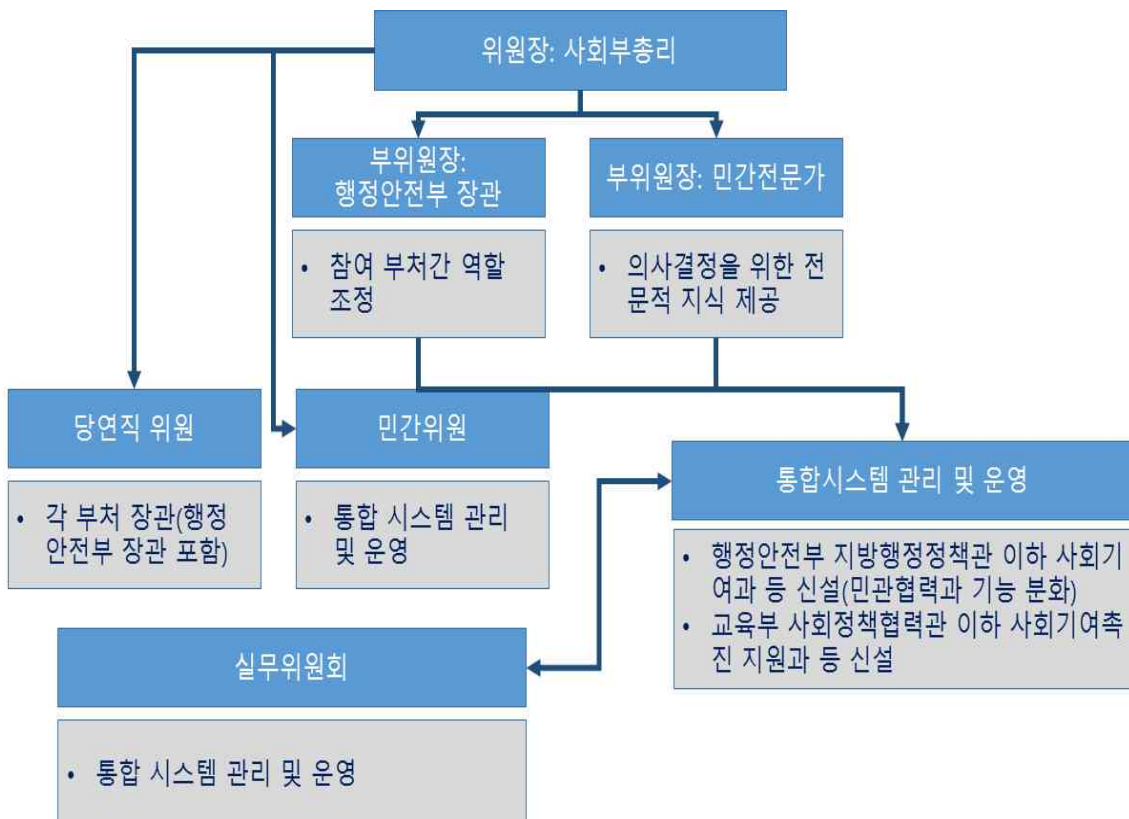
여활동으로 연계하여 모두 활용할 수도 있으나, 또 다른 개인은 사회기여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를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모두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어떤 개인이나 기관은 축적한 시간을 모두 활용할 수도 있으나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축적 시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도 필요

6. 추진체계 설계 방안

- 본 연구는 사회기여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등을 포함한 기존의 개념을 통합할 것을 제안
 -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대체하는 (가칭)「사회기여활동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추진체계를 정비
 -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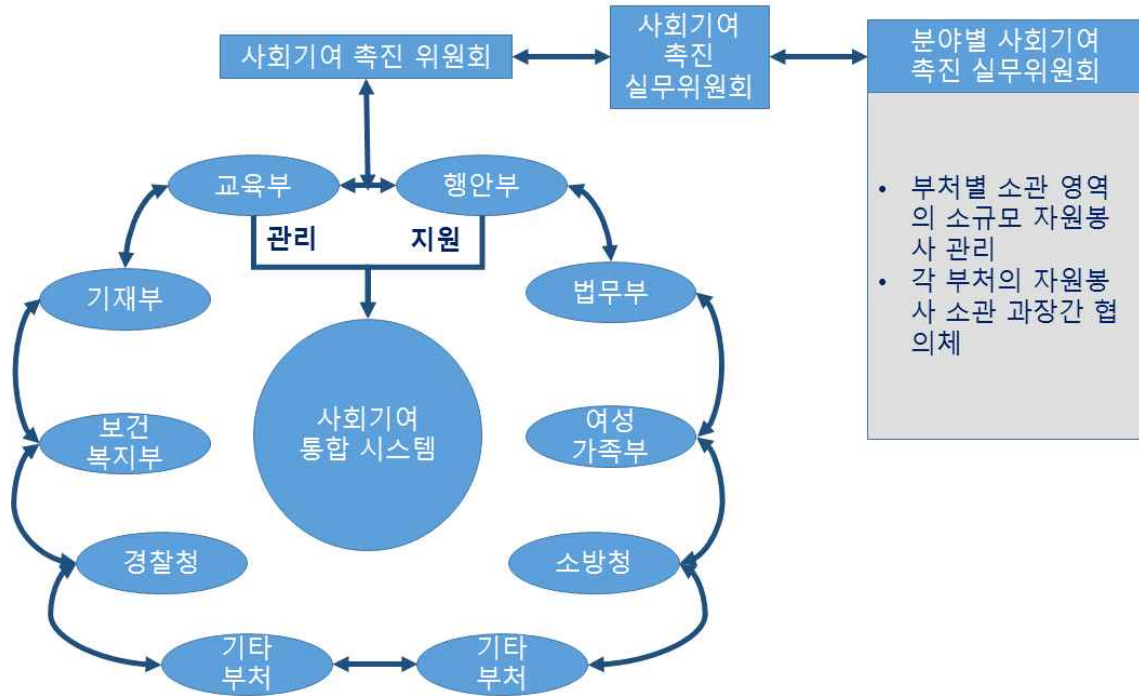
<그림 2> 사회기여 추진을 위한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



- 이에 덧붙여, 사회기여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조를 아래와 같이 제

안(〈그림 3〉 참조)

<그림 3> 사회기여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



○ 제도 도입의 액션플랜

-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해당 제도의 구체화를 위한 시기별 과제와 주요 과업을 종합

<그림 4> 인식개선을 위한 액션 플랜

t(2021~2024)	t+1(2024~2026)	t+2(2026~2028)
↓	↓	↓
시기별 개념(조작적 정의)	시기별 개념(조작적 정의)	시기별 개념(조작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측면) 사회기여활동 시범사업의 실시와 사업결과 피드백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수요 파악 • (추진체계 정비 측면) 사회정책협력관에 사회기여 TF 등 임시조직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는 사회정책총괄담당관에 팀을 구성하는 방식 등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측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개정 및 「사회기여활동 기본법」의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적 측면에서 기존 자원봉사 등을 포괄하는 사회기여의 개념을 정의하고 추진영역 전반 및 지원활동 방식 등을 종합 • (추진체계 정비 측면) <그림 7-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기여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조 전반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에 사회기여 총괄(관리) 부서의 정규조직화 ▪ 행안부 지방행정협력관 민관협력과의 기능을 분화하여 사회기여 지원 부서의 정규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측면) 개정된 법률 등을 근거로 시행령의 구체화 등을 병행하고, 각 부처 및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조직 등의 사회기여 관련 규정 등을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는 사회기여 하위활동(타임뱅크, 푸드뱅크, 마이크로 크레딧 등)별 규정의 구체화 시도(시행규칙 등에서 각 유형을 구분 및 지원체계 명확화) • (추진체계 정비 측면)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 포털을 중심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통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통합은 법령 개정을 시점으로 실시하되 해당 시스템의 안정화 등 시기를 고려하여 세 번째 시기로 포함
↓	↓	↓

시기별 주요과제	시기별 주요과제	시기별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의 설계 및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정책협력관 또는 사회정책총괄담당관에 TF팀 설립 후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의 성과관리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수요 발굴 사회기여활동의 개념과 구조 등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개정 및 「사회기여활동 기본법」의 제정 「사회기여활동 기본법」에 근거한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 및 교육부, 행안부 직제규정 개정 등을 통한 신규부서의 신설 병행 제도 추진을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 사회기여활동의 각 요인별 구성을 통해 통합시스템의 하위 카테고리 개발 및 세분화 사회기여활동 세부 과제별 설계와 확산
↓	↓	↓
다음 시기로의 전환 요건(규범적)	다음 시기로의 전환 요건(규범적)	다음 시기로의 전환 요건(규범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회기여활동 등의 효과성 등이 입증된 시점 해당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기여활동 기본법」의 제정 해당 법률을 근거로 거버넌스 구조의 전환 및 과 단위 부서의 개편이 완료 통합 시스템 개편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 시스템 개편 완료 사회기여활동의 하위 카테고리별 관리체계 완료

7. 시범사업 설계

-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논의한 사회기여 보상제도 설계를 위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안)을 제안
 - 총 세 개의 시범사업 대상을 제안하였고, 이 중 은퇴 교원을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

<표 2> 시범사업 설계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시범사업 대상의 선정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월성 측면: 교육부가 가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은퇴 교원 섭외 및 조직화 등에 유리 • 당위적 측면: 국정 목표(지방분권 차원) 및 국정과제(취약계층의 교육 강화) 등과 밀접하게 연관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의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1: 지자체 면적과 교통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 인구소멸 지역 등과 같이 교육여건이 극도로 좋지 않은 지역을 우선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물리적 이동 거리와 적절한 은퇴 교원의 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실패(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 등이 시범사업 도입에 유리) • 요건 2: 수요 학생의 수(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예상 참여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 수급자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등을 기준으로 선정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양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중랑구, 광진구 등의 인구밀도가 높음을 확인 • 지방자치단체 중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관내의 자치구는 평균 35.5%의 재정자립도를 보임 ☞ 인구밀도가 높은 지자체 중 동대문구(25.8%)와 중랑구(24.9%) 등이 적절한 대상으로 판단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협력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자체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이 용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울시교육청(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인근의 교육지원청 등) ② 사회정책협력관, 교원정책과, 교육복지정책과, 지방교육재정과, 방과후 돌봄정책과, 평생학습정책과, 교육기회보장과 ③ 행정안전부 민관협력과 등과 협업을 통한 노하우 공유 가능 ④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차원의 노하우 공유를 위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연계 고려 ⑤ 은퇴 교원 연계를 위한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공단 간 연계 고려 	
대상 선정의 방식과 적정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교육지원청 등과 연계하여 은퇴 대상자(퇴직 6개월 미만자)를 대상으로 공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 전 사전 교육(주말 등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참여 시간 등도 사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및 사립학교 등 포괄하여 주요교과별 5명 내외 ☞ 총 30명 수준을 사전 섭외 	<p>여 시간으로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인정과 개인적 동기 강화를 위한 ① 교육 수료증 발급, ② 시범사업 대상에 대한 명예증 발급(교육부장관, 차관 주관), ③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 출범 전 의견 수렴 및 보완 추진
시스템 개선의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되, 시범사업 단위에서는 1365 자원봉사포털(NEIS와 연계)을 중심으로 은퇴 교원 사회기여 시범사업 시스템 등을 단기적으로 운영(별도의 배너 등 마련) • 용역 단위의 정립을 위한 시간 단위의 시스템 목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참여자의 목록화 및 시간 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간 축적 후 필요 시점에 다른 형태의 용역으로 교환 ② 축적된 시간의 재기부: 재기부 대상 기관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기부 추진을 위한 소득공제 등의 장기도입 검토 ③ 축적 시간 단위별 명예장 지급 방식과 주체 검토 	
자원조달의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 자원봉사 예산을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 • 단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과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시범사업 예산을 연계된 지방교육청 등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65 자원봉사포털 등의 정비 비용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수료회 개최 비용 ☞ 홍보 등 기타 비용 등 ☞ 시범사업 교육을 위한 장소 등 대관 비용: 기존의 평생교육원 등과 같은 추진체계 활용 고려 	
참여 학생의 모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지역 관내 학교별 홍보 및 참여 학생 모집 공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수급가구 등의 아동 및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한 독려와 참여 촉진 등(기존 방과후 돌봄 대상 등과 연계도 고려) 	
성과관리 및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사업의 확대 필요성 등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만족도 등(사회기여자: 은퇴 교원, 사회기여 참여자: 학생)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기여자 중심의 만족도와 효용성 등을 평가하고 확대 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액션플랜은 아래와 같음

<그림 8-2> 인식개선을 위한 액션 플랜

t(2021~2024)	t+1(2024~2026)	t+2(2026~2028)
↓	↓	↓
시기별 개념(조작적 정의)	시기별 개념(조작적 정의)	시기별 개념(조작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측면) 사회기여활동 시범사업의 실시와 사업결과 피드백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수요 파악 • (추진체계 정비 측면) 사회정책협력관 이하 사회기여 TF 등 임시조직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는,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이하에 팀을 구성하는 방식 등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측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사회기여활동 기본법」 등으로 법률명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적 측면에서 기존 자원봉사를 포괄하는 사회기여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추진영역 전반 및 지원활동 방식 등을 종합 • (추진체계 정비 측면) <그림 5-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기여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조 전반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이하 사회기여 지원 부서의 정규조직화 ▪ 행안부 지방행정협력관 이하 민관협력과의 기능을 분화하여 사회기여 관리 부서의 정규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측면) 개정된 법률 등을 근거로 시행령의 구체화 등을 병행하고, 각 부처 및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조직 등의 사회기여 관련 규정 등을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전반의 구성 방식을 재편하여 사회기여 하위활동(자원봉사, 푸드뱅크, 마이크로 크레디트, 타임뱅크 등)별 규정의 구체화 시도(시행규칙 등에서 각 유형을 구분 및 지원체계 명확화) • (추진체계 정비 측면)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 포털을 중심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통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통합은 법령 개정을 시점으로 실시하되 해당 시스템의 안정화 등 시기를 고려하여 세 번째 시기로 포함
↓	↓	↓

시기별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의 설계 및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이하의 TF팀 설립 후 •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의 성과관리 •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수요 발굴 • 사회기여활동의 개념과 구조 등 명확화



다음 시기로의 전환 요건(규범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회기여활동 등의 효과성 등이 입증된 시점 • 해당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 활성화

시기별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률의 재개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사회기여활동 기본법」으로 변경 • 「사회기여활동 기본법」에 근거한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 및 교육부, 행안부 직제규정 개정 등을 통한 신규부서의 신설 병행 • 제도 추진을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 시작



다음 시기로의 전환 요건(규범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여활동 기본법」의 제정 • 해당 법률을 근거로 거버넌스 구조의 전환 및 과 단위 부서의 개편이 완료 • 통합시스템 개편 시작

시기별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 • 사회기여활동의 요인별 구성을 통해 통합시스템의 하위 카테고리 개발 및 세분화 • 사회기여활동 세부 과제별 설계와 확산



다음 시기로의 전환 요건(규범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시스템 개편 완료 • 사회기여활동의 하위 카테고리별 관리체계 완료